

JEJU FORUM REVIEW

지속가능개발의 최전선, 제주

reports

환경보전·개발 양립 가능하려면
'제주다움'이 곧 세계적·보편적 문화

interview

김숙
선당리

2016-4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사무국

JEJU FORUM REVIEW

제4호 | 2016-4

prologue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2

reports

01 환경보전·개발 양립 가능하려면 6

02 '제주다움'이 곧 세계적·보편적 문화 12

interview

김숙 20

선당리 22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2016년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Asia's New Order and Cooperative Leadership)’이란 주제 아래 이 시대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국가·지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는 말이 있듯 아시아가 국제사회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와 질서 창출에는 협력적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국제사회 주역은 군사·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뿐 아니라 가치와 질서를 선도하고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소프트파워를 수반할 때 제 구실을 다했다. 이제 아시아가 협력적 리더십의 중심점이 돼 다양한 계층·민족·문화를 포용하고 통합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2017년은 새 유엔 사무총장 취임, 미국 등 주요국 리더십 교체, ASEAN 출범 50주년, 브렉시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기후변화협정 Post 2020 등 범세계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제주포럼의 주요 시사점을 요약 정리한 <제주포럼 리뷰>가 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하나의 지침이 되었으면 한다.

2001년 출범한 제주포럼은 매년 5월 전·현직 국가지도자, 오피니언리더, 정책입안자, 언론인 등 세계 지성이 한자리에 모이는 다자협력 논의의 장이다.

<제주포럼 리뷰>는 올해 제주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을 7개 키워

드로 정리, 연관성 있는 내용을 묶어 네 권으로 엮었다. 각 권은 주제별 정책제안 성격의 요약 보고와 주요 연사를 직접 만나 관련사항에 대해 들은 인터뷰로 구성됐다.

2016-1호는 ‘아시아, 협력의 중심에 서다’를 주제로 협력적 리더십과 한중일 3국 협력을 다뤘고,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 창립자 요한 갈통(Johan Galtung) 박사와 양허우란(Yang Houlan)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인터뷰를 실었다. 2호는 ‘비핵화와 평화통일의 조건’을 주제로 핵 안보와 한반도 통일 관련 시사점을 중점적으로 다뤘고, 옌쉐퉁(Yan Xuetong) 칭화대학교 당대국제관계연구원장,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이브 티베르기엥(Yves Tiberghien)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아시아연구소장 인터뷰를 담았다.

3호는 ‘위기의 한국경제, 혁신이 답이다’를 주제로 경제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 기업 인권, 지원 방안들을 다뤘고, 세타풋 수티와르트 나루에푿(Sethaput Suthiwart-Narueput) 태국미래재단 대표이사, 유안 그레이엄(Euan Graham) 로위국제정책연구소 국제안보연구부장, 제프리 킬(Geoffrey Till) 킹스칼리지런던 명예교수 인터뷰를 게재했다. 4호는 ‘지속가능 개발의 최전선, 제주’를 주제로 글로벌 제주 발전전략을 환경, 문화 관광 측면에서 다루고, 김숙전 주유엔대표부 대사와 셴딩리(Shen Dingli) 푸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부원장 인터뷰를 실었다.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사무국

reports

01 환경보전·개발 양립 가능하려면

02 '제주다움'이 곧 세계적·보편적 문화

01 환경보전·개발 양립 가능하려면

제주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지속가능개발의 시험장이다. 2015년 12월 파리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 '카본프리 아일랜드(Carbon-Free Island, 탄소 없는 섬) 2030' 계획을 발표한 제주는 '청정'과 '공존'을 미래비전으로 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해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은 범세계적 과제가 됐다. 제주포럼 관련 세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인구와 탄소 배출이 도시에 집중되는 만큼 탄소중립성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정책 입안과 이행 과정에 앞장서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전 세계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신기후변화체제는 각국 정부와 기업의 엄중한 도전 과제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세계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는 제11회 제주포럼을 통해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차, 문화산업, 지속가능한 관광 분야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세계 환경수도'를 지향하다

관련 세션 발표·토론자는 제주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환경·교

통·주택·쓰레기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제주 러시' 열풍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긴 하지만 주택 공급난과 교통 혼잡, 환경 훼손 등을 일으켜 지속가능한 성장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려했다.

'국제자유도시 미래 발전 방향과 인프라 조성 방안' 세션에서는 제주의 특성과 실정에 맞춰 청정 환경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자립형 섬' 추구 방안과 관광과 휴양이 한데 어우러진 개발 모델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제주도는 2016년 2월 '청정'과 '공존'을 핵심 가치로 설정한 미래비전을 선포하고 실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의 지정학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활용의 시험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것이다. 김용민 제주한라대학교 교수는 '아시아-한국 간 지속가능 에너지시스템 협력 방안' 세션에서 "제주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최전선"이라고 제주의 위상을 표현했다.

제주포럼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개회사에서 "공존의 질서와 가치가 공유될 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며 제주도는 '새로운 평화'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의 대자연이 주는 '치유의 평화', 이해관계를 넘어 포용하는 '관용의 평화',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이 평화롭게 이뤄지는 '에너지 평화'가 그것이다. 에너지 평화의 대표적인 사업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일상생활에 쓰이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가능 에너지(풍력, 태양광 에너지)로,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는 정책이다. 제주포럼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제주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에 관한 아시아-한국 간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몇 가지 부문이 제시됐다.

첫째,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R&D센터 건립이다. 제주의 풍부한 태양광·풍력 에너지와 국내 최초 시험파력발전소 건설(2016년 7월 준공) 등이 이러한 정책 실현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둘째, 제주를 지속가능한 에너지 교육기지로 만드는 것이다. 셋째,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만든 생산물의 테스트

베드 역할이다. 제주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물의 테스트베드로 활약하는데 지정학적·환경적으로 아시아에서 최고의 적지로 꼽힌다.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세션 발표자로 참여한 김희집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마이크로그리드와 제로에너지빌딩 등과 같은 실험이 제주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라 밝히고 “이는 제주도뿐 아니라 한국에도 중요한 기회이며 세계적으로도 훌륭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제주가 가장 앞서가는 분야가 바로 전기차다. 제주도의 전기차는 2015년 말 2300여 대에서 1년 새 3888대(2016년 10월 기준)로 늘어날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중 40% 이상이 제주도에 있는 셈이다. 제주도 내 전기차 대수는 전체 차량의 1% 이상을 차지해 ‘전기차2.0시대’라 일컬어지고 있다.



이런 성장세에는 전기차 인프라의 역할이 크다. 제주도 내 전기차 충전소는 총 273곳(2016년 11월 기준)으로 국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의 약 25%를 차지한다. 제주도 내 주유소는 225개, LPG 충전소는 26개로 이미 전기차 충전소가 도내에 있는 주유소 수를 넘어섰다.

“제주, 세계 전기차 시장의 시험 모델이 될 수 있다”

- J.B. 스트라우벨
테슬라모터스 최고기술책임자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모터스의 J. B. 스트라우벨(Jeffrey Brian Straubel) 공동창업자 겸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전기차가 몰고 올 생활혁명’ 대답에서 “제주에 세계에 내보일 수 있는 전기차 시장의 시험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제주의 전기차 비전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전기차로 완전히 대체하는 일에는 전기 수요가 관건이다. 김상협 카이스트 초빙교수는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세션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전기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송경열 맥킨지 클린테크 리더는 “실질적인 에너지 수요는 10~20% 정도 늘어날 뿐”이라며 “도내 모든 차량이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큰 발전소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세션에서 김희집 위원장은 “마이크로그리드나 제로에너지빌딩 등의 실험도 제주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제주도와 함께 추진 중인 이들 프로젝트 중 제로에너지빌딩은 2020년까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건물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합산해 에너지 소비량이 최종적으로 ‘제로’가 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주도는 바람과 일조량이 많아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에 유리한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2017년부터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김 위원장은 “제주도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는 한국의 중요한 기회이며 세계적으로 훌륭한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 퀴바디스?’ 세션에서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을 글로벌 브랜드로 업그레이드시키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탄소 제로형 생태관광 모델 개발과 탄소 제로 섬 국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탄소 제로 섬을 국내외로 확산시키자는 것이다.

제주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비전을 덴마크의 '녹색혁명'과 비교 분석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덴마크는 2050년까지 무탄소 국가 전환을 목표로 세웠으며 그 가운데 서귀포시 가파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보른홀름 섬은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이미 실현해 냈다.

토마스 리만(Thomas Lehmann) 주한 덴마크 대사는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세션에서 "제주도의 사회 변혁 과정은 덴마크와 유사하다"며 전기차와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대규모 인프라 발전을 근거로 들었다. 제주와 덴마크가 유사성이 높은 만큼 덴마크 사례가 제주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2016년 3월 덴마크 유관기관 간 정부 교류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학·연 교류를 본격화했다.

전문가들은 제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책 연속성'과 '기업 투자'라 지적했다. 덴마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 정치적 리더십과 국민의 의지가 조화를 이룬 점이 꼽혔다. 리만 대사는 "투자자들은 정책이 흔들리면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기업을 설득해 투자를 유치하되 정책의 일관성·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개발이란 환경을 지키면서 경제를 키워 나가는 성장 방식이다. 덴마크는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바꾼 사례로 꼽힌다. 덴마크는 1971년 세계 최초로 환경부를 신설한 후 모든 분야에서 지

속가능성을 고려한 국가정책을 수립했다. 1990년대와 비교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0% 이상 줄어들고 국내총생산(GDP)은 약 40% 늘어났다.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은 시간이

**“제주 특유의 스케일과 공간을
보전하기 위해 지형과 지문을 고려한
건축 태도가 필요하다.”**

— 백혜선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흐름수록 성장해 2014년에는 에너지 수출(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이 전체 수출의 12%를 차지하며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리만 대사는 이러한 사례를 소개하며 “환경을 위해 경쟁력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을 실현해 나갈 방법 중 또 하나는 해조류 활용이다. 세계해조류학회 회장을 역임한 티에리 쇼핀(Thierry Chopin) 뉴브런스윅대학 교수는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해조류 이용 전략' 세션에서 "제주 바다는 한국 해조류 자생의 중심지로 종 다양성 차원에서 연구·보전해야 함은 물론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선진적 생태통합양식(IMTA)을 통해 탄소 거래제와 비슷한 '영양염 거래제(NCT)'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정익교 부산대학교 교수는 "바다의 산소 공급원이자 이산화탄소 저감원인 해조류가 신기후변화체제에 대응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조류는 수중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이산화탄소 제거 효율성이 뛰어나고 청정 바이오에너지 생산원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제주가 해조류 인공 양식을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의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3관왕 지역이다. 따라서 자연유산을 제대로 보전·관리하는 동시에 해중 지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 그룹은 '화산지형·해양환경 세계자연유산 발전과 보전' 세션에서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해중 화산, 열수공, 해저 산악, 환초 등에 관한 인접국과의 공동 연구 및 유산 지역 지정을 제안했다.

02 '제주다움'이 곧 세계적·보편적 문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청정'이라는 환경가치와 더불어 제주 고유의 문화가치 보존도 중요하다. 제주포럼은 그간 제주 고유문화 정체성 찾기와 보전·확산 방안을 논의해 왔다. 참석자들은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공존하는 '제주다움을 지켜 내고'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자연미에 인간의 지혜가 깃든 건축

제10회 제주포럼에서는 '평화의 섬 제주, 문화를 이야기하다' 세션이 마련돼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과 문화활동가들의 다양한 시도를 살펴봤다.

문화 세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제주의 난개발과 외국인 토지 매입이 제주의 고유문화 보존을 위협하는 요인이라 분석했다.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제주라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살린 개발을 지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백혜선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제주의 정체성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고유문화에 있으므로 특유의 스케일과

공간을 보전하기 위해 지형과 지문(한라산, 오름, 해안선)을 고려한 건축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자연을 건축에 녹여내는 방법 중 하나로 버나쿨러(vernacular) 건축과 발터 벤야민의 '다공성(porosity)' 개념을 더한 도시 경관 형성 방식을 제안했다. 버나쿨러 건축은 재료와 삶의 문화를 건축에 온전히 담아내는 것이며, 다공성은 도시민들의 일상이 축적돼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상호 침투로 발생하는 무정형의 복합체적 성질을 의미한다. '제주민의 삶'이 문화 풍경으로 드러나도록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제11회 제주포럼 '아티스트 패널토크: 세계적인 예술로 승화되는 제주다움을 찾아서' 세션에서도 제10회에 이어 건축을 통한 제주의 가치 재발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제주 신산공원에 설치된 88서울올림픽 성화기념 조각품을 제작한 정보원 조각가는 "외형의 모방과 재현이 아니라 진실된 창작으로 제주의 문화를 녹여내는 것만이 제주다움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프랑스 남부 코르시카 섬이나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허름한 역에 도착했을 때 감탄하는 것은 자연의 소리와 오랜 역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과 그 지역의 삶과 정서가 녹아든 문화가 남아 있는 곳을 찾는다는 지적이다.

세션 좌장을 맡은 김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는 "바람과 돌이 만들어 내는 토속적 풍토아말로 제주만의 자원이자 제주 자연이 지닌 본연의 뿌리이므로 건축에 제주의 토속성을 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제주 돌담의 예를 들었다. 제주 문화의 대표적 아이콘인 돌담은 바람과 맞서지 않고 바람을 받아들인 제주 조상의 지혜가 녹아 있는 문화다. 김 대표는 "제주 돌담은 돌과 돌 사이의 구멍 때문에 바람의 힘을 덜 받아 콘크리트 벽보다 더 강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대표는 "내륙에 건물을 짓기보다는 '플로팅 에어포트', 크루즈 선박의 유동성 등 지속가능한 건축"이 최근의 건축 트렌드라고 덧붙였다.

김개천 국민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교수는 '숨김(hidden)'과 '아우라

(aura)'라는 단어로 제주의 도시건축 방향을 제시했다. '숨김'은 건축 자체를 최대한 절제하는 것, 예를 들어 건축에 필요한 기본 재료 외에 눈에 띄는 마감이나 장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아우라'는 제주 본연의 자연환경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을 뜻한다. 세계적인 건축가 이타미 준이 설계한 방주교회(서귀포시 안덕면 소재)와 포도호텔(서귀포시 안덕면 소재)이 물, 바람, 돌 등 제주의 자연을 고스란히 담은 동시에 '숨김'을 잘 실현한 예로 제시됐다.

'제주다움'을 드러내는 건축은 정책적 지원이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아티스트 패널토크' 세션에서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공동체적이면서도 미학적인 아름다움까지 추구하는 것이 제주의 공동 가치"라며 "전문가와 제주를 사랑하는 분들이 제안해 주신 대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관광

제주는 관광산업 수입(4조 7000억 원, 2015년 자료)이 '생명산업'이라 불리는 감귤재배 수입(약 6000~9000억 원)보다 네 배 이상 많다. 그만큼 제주의 지역경제에서 관광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2013년부터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제주를 방문하고 있다. 그중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300만 명에 달한다. 2015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 18.3%가 제주를 찾았다. 2011년 대비 8.1%p 증가한 수치다. 크루즈 관광객은 2016년 10월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아시아 지역 204개 목적지 중 가장 먼저 100만 명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무분별한 양적 팽창이 불러온 부작용이 심하다. 쓰레기 급증, 교통난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그 해결책으로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관광'을 제안한다. 지속가능한 관광은 단순히 환경친화적인 것만이 아니라 환경과 문화, 사회경제적 요소를 두루 반영한 대안이다.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논의는 제주포럼에서 꾸준히 다뤄 왔다.

랜디 더번드(Randy Durband) 지속가능관광위원회 대표는 '지속가능 관

광의 투자와 재정' 세션에서 "경제적 편익을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가능 관광 개발 패러다임을 전략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개별 관광기업의 협력도모와 지역사회 지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관여는 필수적이다.

더번드 대표는 그 가이드라인으로 체류 일수, 관광 수입, 재방문을 등질적 관광을 위한 성과측정 지표를 활용한 관광지 관리와 마케팅 계획 수립,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개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이해 조정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제주 맞춤형 지속가능한 관광 로드맵을 제시했다. 강신겸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래사회 변화와 제주의 가치 제고 방안' 세션에서 기존 관광의 틀에서 벗어난 미래 관광을 대안으로 문화와 환경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제주도민의 이야기를 문화예술로 담아내고 이를 생활로 만들어 관광객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 진정성이 소비와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역문화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제주 해녀문화 체험이 여기에 속한다. 최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는 몇 해 전부터 방문자들에게 직접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해녀'라는 제주 고유 문화에 담긴 스토리텔링으로 진정성을 느끼도록 하고, 체험이라는 형태의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는 사례라 볼 수 있다.

2015년 말 현재 제주 해녀는 4377명으로 최근 5년간 504명이 줄었다. 노령화가 심해 60세 이상이 85.7%를 차지하고 있다. 젊은 현직 해녀인 강경옥 씨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내가 꾸는 꿈' 세션에 나와 물질의 공동체적 특성을 생생히 증언했다.

“외형의 모방이 아닌
진실된 창작으로 제주의 문화가
녹여지는 것이 제주다움.”

- 정보원 조각가

자연과 문화를 관광의 유기적 기반으로 만들려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 시민단체, 학계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제11회 제주포럼 ‘환경·사회·경제적 편익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 관광 방안’ 세션에서 강미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연구교수는 지역기반 관광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비전 공유, 리더십, 효과적인 정부 지원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실비아 바본(Silvia Barbone) 유럽지속가능관광재단 소장은 “핵심 비전 공유와 리더십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달려 있다”라며 지자체와 지역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데니스 톨카치(Denis Tolkach) 홍콩 폴리텍대학교 호텔관광경영대 교수는 “지역기반 관광은 지역사회의 역량 구축이 중요하다”라며 “지역민들이 기업가적 기술을 키우고, 서비스 교육이나 파트너십 구축, 이익 분배 등 관광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의 인력과 자본에 제한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강호상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는 “지역기반 관광은 NGO와 학계의 연계가 필요하며 특히 민간부분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최근 이러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주대학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 등 유관기관의 전문가 14명으로 이루어진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한 과제로 거론됐다. 제주도는 정주인구 유입 및 관광객 증가로 차량 대수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 교통 여건 악화는 제주의 쾌적한 이미지를 손상하고 재방문율을 낮추는 등 관광산업 지속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박현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투자개발본부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미래 발전 방향과 인프라 조성 방안’ 세션에서 “관광객 증가는 주택공급난과 교통 혼잡, 환경 훼손 등을 일으키며 미래 지속 성장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참고할 만한 해외 관광지의 유사 사례로 일본 오키나와 현을 들었다. 오키나와의 인프라 정비 내용으로 관광자원 정비, 관광지 등 지역 지원, 교통망 정비, 정보 전달 확충, 환경 보전·재생, 재난 방지·위기 관리 등 6개 분야 정책이 분석됐다. 관광자원 정비는 다리를 건설하면서 교통 편리

성 향상과 더불어 경관 관광 거점으로도 활용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미래 발전 방향과 인프라 조성 방안’ 세션에서는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할 도시 인프라와 효율적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문대섭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저비용·고효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바이모달트램 등 다양한 신교통수단 및 신교통시스템 중 정시성과 경제성을 겸비한 간선급행체계 도입이 제주에 적합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운상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장은 “국제자유도시와 ‘탄소 없는 섬’ 추진을 위해 친환경 광역교통시스템 도입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새로운 교통 인프라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는 “공항 등 주요 교통결절점에 복합환승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광역연계교통체계를 확립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러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나섰다. 여기엔 제주도 전역을 ‘광역급행-간선-지선’ 노선으로 바꾸고 제주나 신서귀포 등 지역에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interview

전 주유엔대표부 대사

김숙

중국 푸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부원장

선당리

“세계 지도자들의 참여 자체가 평화와 번영을 위한 메시지”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는 역할을 정립하고 국제기구를 유치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먼저 어떤 국제기구가 제주도에 이익이 될지 검토해야 한다. 현재 제주는 평화의 섬으로 지정돼 있지만 평화의 범위는 거의 모든 국제기구에 적용될 만큼 광범위하므로 제주만의 차별성을 살릴 수 있도록 어떤 기관을 유치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확고한 방향을 세우고 나서 중앙정부, 해당 국제기구와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포럼 같은 다자 대화 플랫폼이 평화에 기여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제주포럼에는 세계 지도자를 비롯해 많은 저명인사들이 참석한다. 특히 올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다녀갔는데, 이런 지도자들의 참여 자체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한 메시지다.

대북 제재,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대북 제재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과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은 무엇인가?

제재는 비외교적 방법으로 특정 국가가 국제사회의 안정을 깨트릴 때 취하는 특단의 조치다. 우리나라는 북한이 핵 개발을 강행하지 않고 비핵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일단 제재



김숙 전 주유엔대표부 대사는 주미대사관 1등서기관, 제주도 국제관계자문대사,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을 지냈다.

비준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이목을 끌지 못한다. 효과적인 제재는 비준안의 시행과 국제 공조에 달렸다. 뜻을 같이하는 국가 간 협력은 제재 효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북한 학자도 참여해 경제개발 논의했으면”

아태 지역 핵 안전·안보의 기준이 높아졌다.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면서 핵 안보 로드맵이 제시됐고 국제사회 협력도 강조됐다. 향후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성과는 국가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인식 제고일 것이다. 남은 과제는 한중일이 중심점이 되어 회원국 간 핵 안전·안보 문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것이다.

핵무기는 핵 테러리즘보다 더 위협적이다. 만약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핵무기는 한 도시를 통째로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지녔다. 모든 핵무기는 폐기돼야 한다. 5대 핵보유국은 이에 동참해야 하며 비보유국은 핵 개발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북한은 핵 개발 중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핵 안보는 비인가 세력이 핵 분열성 물질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불순한 목적으로 핵 물질을 획득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일은 인류를 위협하고 사회질서를 망칠 위험이 큰 행위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핵 물질을 통제해야 한다.

핵무기가 핵 테러 등 안보 위협보다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부든 테러집단이든 주체와 무관하게 핵무기 사용 자체가 큰 위협이다. 국가



셴딩리 중국 푸단대학 국제문제연구소 부원장은 군축, 비핵화 전문가로 중국 최초로 비정부 군비통제 및 지역안보 연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푸단대학 미국연구센터장, 유엔 사무총장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는 테러집단이 핵 물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핵 군축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은 모든 핵무기 폐기를 이행해야 한다.

평화 정착을 위한 학자, 싱크탱크의 역할은?

학자들은 무엇보다 핵무기 존재 이유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미 정부가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면 중국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도 마찬가지다.

학자로서 핵무기 폐지라는 목적의식을 갖고 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학자들은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지속적으로 주지시켜야 한다. 북한은 미국이 덜 위협적이라고 판단하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시점에서 한국은 자체 핵무기 개발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가 약해질수록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미국이 한국에 압력을 넣은 사실도 경시할 수 없다. 한반도 사드

(THAAD) 배치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사드를 배치해 발생하는 중국과의 불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모두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제 협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주포럼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6자회담의 목적은 첫째가 북한 비핵화, 둘째가 한반도 내 모든 핵무기 폐기다. 동북아 지역 안보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 지역 내 어떤 국가도 핵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핵보유국에서는 핵 없이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제주포럼과 같은 대화의 장이 더욱 활성화돼 북한 학자들이 참석하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 북한 참여에는 득과 실이 있지만 이를 통해 한국 학자들이 북한에 초대받을 기회가 생긴다면 핵 문제가 아닌 경제개발 문제 등 덜 민감한 주제를 논의하면서 긴장 완화를 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제주포럼의 가치가 높아진다. 일본, 중국 등에도 비슷한 종류의 포럼이 있지만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에서 토론하는 것만큼 좋은 대안은 없다.

한반도의 남북 문제 해결에 관해 조언한다면?

제주포럼의 목표처럼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특사가 있었으면 한다. 북한 핵무기 보유량이 많아질수록 그들의 경제는 침체된다. 미국은 비핵화를 선제조건으로 북한에 식량원조를 하겠다고 한다. 북한은 이와 반대로 식량원조를 먼저 요구한다.

실용적인 것이 최선이다. 식량원조의 타당성은 핵 보유와 무관하다. 나는 미국이 비핵화를 주장하기 전에 식량원조를 먼저 하라고 권고한다. 비핵화 조치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강경하다. 미국이 좀 더 유연해지길 희망한다. 점진적인 비핵화와 함께 대량의 식량원조를 추진할 것을 조언하고 싶다. 북한이 비핵화를 빠르게 진행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우호국이고 북한 핵 개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중국은 식량원조를 계속해야 한다.



통권 제4호 2016-4 | 발행 2016년 12월 9일 | 발행처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사무국 | 등록 제 652-2008-00002호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우) 63546 | 전화 064-735-6533 | 팩스 064-738-6539 | 전자우편 jejuforum@jpi.or.kr | 홈페이지 www.jejuforum.or.kr | 디자인·제작 DesignZoo

© 제주포럼 사무국 이 글은 2016년 5월 25~27일 열린 제11회 제주포럼에서 발표된 내용과 인터뷰 내용을 제주포럼 사무국이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제주포럼 조직위원회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비매품>

JEJU FORUM REVIEW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사무국 | 6354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Tel 064-735-6533 Fax 064-738-6539 Email jejuforum@jpi.or.kr Website www.jejuforum.or.kr
Facebook www.facebook.com/jejuforumpp Blog <http://blog.naver.com/jejuforum>

〈 비매품 〉



9 788993 764123
ISBN 978-89-93764-12-3 (전 4권)